

AI 사업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사업 관리 패러다임:

공공 AI, '구축'이 아닌 '진화'의 패러다임으로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초빙교수
bigcandy@kaist.ac.kr



서론: 왜 AI 사업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가?

최근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세계 1위 AI 정부'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¹. 이러한 정책적 의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AI 분야 총예산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액된 10.1조 원으로 편성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². 복지, 고용, 납세 등 주요 공공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선도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공공 AI 사업의 수와 규모, 그리고 기술적 복잡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¹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²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5.8.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추진 동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 AI 사업은 기존 정보화(IT) 사업을 관리하던 방식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AI 사업의 고유한 특성, 즉 결과의 불확실성, 데이터에 대한 극심한 의존성, 끊임없는 실험을 요구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전통적인 IT 사업 관리 방식은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연구개발(R&D)의 성격을 띠는 AI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막대한 잠재력을 공공 부문에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사업의 고유한 DNA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모델과 전문화된 가이드라인, 즉 ‘새로운 플레이북’의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AI 사업이 기존 IT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현행 공공 SW 사업 시스템이 AI 시대에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진단하며, 성공적인 공공 AI 도입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AI 사업의 고유한 DNA: 전통적 IT 사업과의 근본적 차이

AI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은 AI가 단순히 IT의 연장선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흔히 AI 개발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하위 집합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두 영역이 일부 겹치는 별개의 분야에 가깝다³. AI 사업과 전통적 IT 사업의 본질적 차이점은 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DNA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사업 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결과물: 결정론적 vs. 확률적

전통적 IT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코드에 따라 동일한 입력에 대해 항상 동일한 결과를 내놓는 ‘결정론적’ 특성을 가진다. 반면, AI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를 추론하는 ‘확률적’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는 AI의 결과물이 100%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교육된 추측(educated guess)’이며,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블랙박스’ 문제라는 큰 부담을 안겨준다.

³ Kavita Ganesan, AI Development vs. Traditional Software Engineering, Opinions Analytics, <https://www.opinions-analytics.com/blog/ai-vs-software-engineering/>



핵심 자산: 코드 vs. 데이터 및 모델

전통적 IT 사업의 핵심 자산이 '코드'라면, AI 사업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된 '데이터 및 모델'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AI 모델의 성능은 코드의 정교함보다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수집, 정제, 가공 단계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모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발 프로세스: 구축 vs. 실험

정해진 요구사항에 따라 기능을 '구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AI 사업은 가설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탐색하며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실험'의 과정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반복적인 시도와 실패를 통한 학습을 전제로 하는 연구개발(R&D) 활동과 유사하다.

품질보증(QA): 기능 검증 vs. 총체적 평가

IT 사업의 QA가 시스템이 요구사항대로 정확히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AI 사업은 모델의 성능, 편향, 윤리성, 견고성, 유용성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평가 및 검증'을 필요로 한다. 단순히 기능의 정상 작동을 넘어,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인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팀 구성: 개발자 중심 vs. 다학제적

전통적 IT 사업이 개발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과 달리, AI 사업은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외에 해당 분야의 현업 전문가, 윤리·법률 전문가 등이 반드시 참여하는 '다학제적 팀'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데이터, 도메인 지식, 윤리적 리스크 등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 전통적 IT 사업과 AI 사업 간의 근본적 차이점

구분	전통적 IT 사업	AI 사업
핵심 자산	코드	데이터 및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축	실험
결과물	결정론적	확률적
성공 기준	고정된 요구사항 충족	성능 임계치 달성 및 유용성
테스트 및 QA	기능 검증	총체적 평가 및 검증
유지관리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지속적 모니터링 및 재학습
팀 구성	개발자 중심	다학제적
핵심 리스크	범위 확장	모델 성능 저하 및 편향

출처 : 참고한 출처^{4,5,6,7}를 종합 분석하여 필자가 재구성

AI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기존 추진 방식의 그림자

AI 사업의 고유한 DNA를 이해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추진 방식이 부재하다면 혁신은 길을 잃게 된다. 현재 한국의 공공 IT 사업 제도 및 추진 방식은 AI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러 구조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2023)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 AI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전과제로 나타난다.

⁴ Kavita Ganesan, AI Development vs. Traditional Software Engineering, Opinions Analytics, <https://www.opinions-analytics.com/blog/ai-vs-software-engineering/>

⁵ Jose Solera, Why do AI projects seem to struggle more than regular IT projects?, Medium, 2025.10., <https://medium.com/coach-jose-leadership-and-project-management/why-do-ai-projects-seem-to-struggle-more-than-regular-it-projects-1c3e5ac5ecce>

⁶ Navigating the Nuances: AI Project Management vs. Traditional Software Projects, Mindtitan, <https://mindtitan.com/resources/blog/ai-project-management/>

⁷ Elena Walters, Why Managing AI Centric Projects is Challenging?, GoodFirms, 2025.6., <https://www.goodfirms.co/project-management-software/blog/challenges-of-ai-centric-project-management>

⁸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3.10.20.

■ 표 2 - 공공 부문 AI 서비스 추진 시 주요 애로사항(국회입법조사처, 2023)

구분	주요 애로사항 및 문제점
인식 및 문화	- 내부: 공무원의 AI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변화 저항 - 외부: 시민의 과도한 기대로 인한 현실 기술과의 괴리
데이터	- AI 모델 성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확보 곤란 - 조직 간 '데이터 칸막이'로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미흡
보안 및 규제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 - 각종 데이터 보호 법률로 인한 적극적 데이터 활용 제약
예산 및 제도	- 높은 초기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대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 사업 추진 이후 법·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중단 위험 부담
역량 및 거버넌스	- 사업을 주도할 내부 AI 전문가 및 리더십 부재 - 중앙 정부의 명확한 공통 기술 및 가이드라인 제공 미흡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2023.10.20.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경직된 예산·대가 제도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사전에 확정된 예산과 과업 범위 내에서 수행되므로, 가설 검증과 반복적인 실험이 필수적인 AI 사업의 특성을 지원하기 어렵다. 현행 발주제도나 대가 가이드는 데이터 정제, 모델 재학습 등 반복적인 활동(iteration)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충분한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동기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PoC(기술 검증)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유연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단절된 사업 구조와 지속성의 부재

대부분의 IT 사업이 단년도 단위로 발주되고, 개발 사업과 운영·유지보수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AI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변화로 성능이 저하되는 '모델 드리프트(Model Drift)' 현상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재학습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책임성 있는 관리가 어려워, 한번 구축된 AI 모델이 방치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채로 운영될 위험이 크다.

전문성 부족과 문화적 장벽

잦은 보직 순환으로 인해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렵고, AI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될 위험이 크다. 이는 발주자와 사업자 간의 심각한 인식 격차(Gap)를 야기한다. 또한, 문제 해결의 유용성보다 'AI 도입'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불명확한 성공 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능 평가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위험을 높인다.

전통적 사업 관리 방식과의 충돌

요구사항 상세화 기반의 전통적인 폭포수(Waterfall) 방법론은 탐색과 발견이 중요한 AI 사업에 부적합하다. 그럼에도 기존 IT 사업의 틀에 AI 사업을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애자일(Agile)·실험 기반의 접근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단기 개발 기간 내에 요구된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크다.

성공적인 공공 AI를 위한 제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관리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공공 부문의 사업 관리 방식은 AI의 본질적 특성과 충돌하며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AI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핵심은 AI 사업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전체 생애주기를 재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제언: AI 사업 생애주기의 재정의

공공 부문 AI 사업이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진 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선형적(ISP → 구축 → 운영)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AI의 본질적 특성인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탐색 → 검증 → 확산’의 반복·진화형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생애주기는 AI 사업을 하나의 거대한 단일 과업이 아닌, 연속적인 학습과 발전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AI 사업은 거대 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의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하여 특정 공공 문제(Vertical)에 맞게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제언은 이러한 ‘도입 및 활용’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생애주기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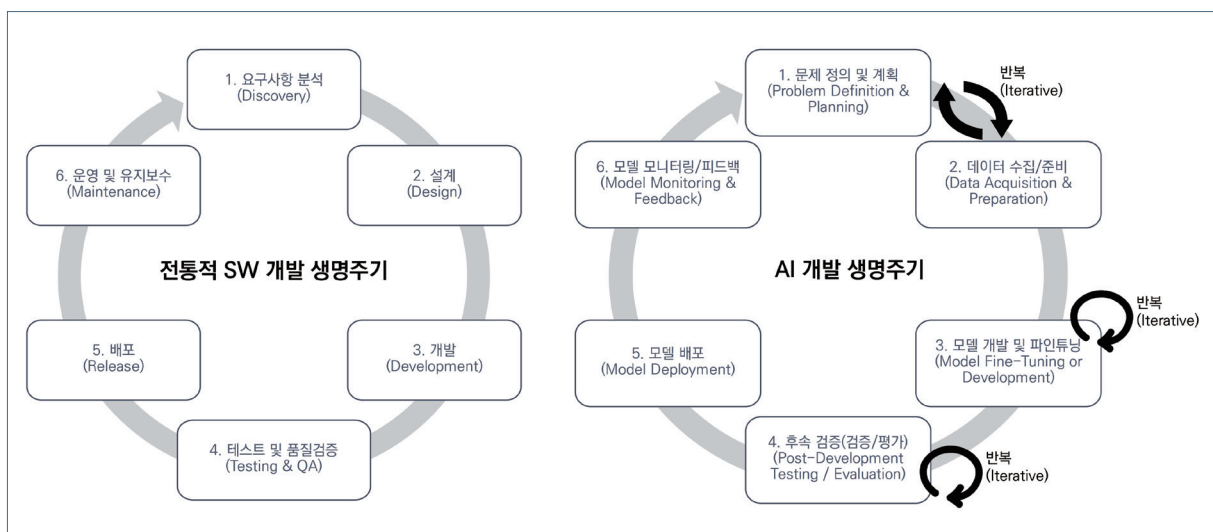
[1단계: PoC/파일럿을 통한 탐색 및 검증] 이 단계는 아이디어의 기술적·사업적 타당성을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확인하는 ‘발견의 과정’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대신, “이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가?”와 같은 핵심 질문에 답을 찾는 데 집중한다.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이 단계에서의 유연한 실험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르는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2단계: Agile 기반 점진적 구축 및 확산] 1단계에서 그 가치와 실현 가능성이 검증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MVP(최소기능제품)부터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해 나간다. 애자일(Agile) 방법론을 적용하여 짧은 주기로 기능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최종 결과물이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갖춘 시스템을 완성해 나간다.

[3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AI 모델은 한번 배포되면 끝나는 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변화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모델 드리프트(Model Drift)’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배포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데이터 재학습을 통해 모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는 ‘운영·유지보수’라는 수동적 개념을 넘어, AI 시스템을 살아있는 자산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능동적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애주기의 재정의는 단순히 방법론을 바꾸는 것을 넘어, AI 사업의 본질을 공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철학의 전환이다. 이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기존의 선형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끊임없이 순환하고 반복하며 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 그림 1 -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좌) vs. AI 개발 라이프사이클(우)



출처 : Kavita Ganesan, AI Development vs. Traditional Software Engineering, Opinois Analytics, <https://www.opinois-analytics.com/blog/ai-vs-software-engineering/> 기반으로 번역 및 재구성함

이러한 새로운 생애주기 모델이 공공 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관점의 전환) ‘가치 중심’의 문제 정의

모든 AI 사업은 ‘AI로 무엇을 할까’가 아닌, ‘어떤 시급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업 착수 전에 해결할 문제의 명확성, 데이터 확보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데이터 보안 및 시민 신뢰 확보 방안, 법적·윤리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I 준비도(Readiness)’ 진단 절차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AI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다. 캐나다의 ‘알고리즘 영향평가(AI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⁹ 제도처럼,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위험 분야는 유사한 사전영향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실험적 공간’의 제도화

새로운 생애주기의 첫 단계인 ‘탐색 및 검증’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PoC나 MVP 개발을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AI PoC나 MVP만을 위한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다년도 R&D 예산처럼 유연하게 운용하는 한편, 새로운 조달·계약 방식(예: 단계별 경진대회 방식, 경쟁적 대화 방식, 성과 기반 계약, 개산 계약 등), 그리고 실험적 활동에 대한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AI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실험적 공간’은 발주기관 입장에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사전에 비교·검증함으로써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적의 AI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과 달리, 도입 실패 시 감사 부담과 행정 공백의 위험이 큰 공공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혁신을 시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험 관리 절차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합리적인 실패’를 용인하고, 성과에 따라 본격 구축 사업으로의 연계를 의무화함으로써, 탐색·검증 단계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역량 강화) 발주기관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

성공적인 AI 사업은 ‘똑똑한 발주자’를 필요로 한다. 발주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AI 기술 및 사업 관리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AI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과학자, 현업 전문가, 법률·윤리 전문가가 포함된 다학제적 팀 구성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⁹ Government of Canada,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tool, <https://www.canada.ca/en/government/system/digital-government/digital-government-innovations/responsible-use-ai/algorithmic-impact-assessment.html>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 생태계의 성숙도이다. AI 기술력을 가진 전문기업만으로는 복잡한 공공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기존 시스템과의 안정적인 통합과 데이터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공공 부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통적 SI 사업자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의 Vertical AI 솔루션을 기존 행정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통합·연계하는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그룹의 사업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나아가 전통 SI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AI 역량을 확보하고 내재화하여 신뢰성 높은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선)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 마련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현행 법·제도는 SW를 건축 공사와 유사한 ‘폭포수 모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AI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과업 변경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실험적·반복적 개발 방식에 맞는 새로운 계약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발주 담당자가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표 3 - 공공 AI 사업을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제안 요약

구분	핵심 제안	주요 실행 과제
패러다임 전환	AI 사업 생애주기 재정의	- 기존 선형적(ISP→구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탐색→검증→확산’의 반복·진화형 모델로 전환 (1단계) PoC/파일럿 → (2단계) Agile 구축 → (3단계) 지속적 모니터링·개선
관점의 전환	‘가치 중심’의 문제 정의	‘AI 도입’이 아닌 ‘공공 문제 해결’에서 사업 기획 출발 - 데이터 확보, 법·윤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AI 준비도(Readiness)’ 진단 의무화 - 고위험 분야에 사전 AI영향평가 도입 검토
제도적 지원	‘실험적 공간’의 제도화	- PoC/MVP 개발 장려 및 합리적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 - AI 실험·검증을 위한 별도 펀드 조성 및 유연한 조달·계약 방식 도입 - 발주기관의 리스크 감소 및 최적의 솔루션 확보 지원
역량 강화	발주기관과 산업 생태 동반 성장	(발주기관) AI 사업 관리 전문 교육을 통한 ‘똑똑한 발주자’ 양성 및 다학제적 팀 구성 (산업 생태계) AI 전문기업과 전통 SI 사업자 간 협력 장려 및 역량 동반 성장 지원
법·제도 개선	혁신 뒷받침 기반 마련	- AI 사업 특성에 맞게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현행 법·제도 개정 - 과업 변경 유연성 허용 및 반복·진화형 계약 모델의 법적 근거 마련 - 적극 행정을 위한 감사 부담 완화

결론: AI 시대, ‘진화하는 정부’를 향하여

본고에서 제안한 새로운 사업 관리 패러다임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절차나 규정집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공 부문 내에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문화’를 심는 촉매제여야 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전하는 문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데이터를 공공의 자산으로 여기고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그리고 한번 구축하면 끝나는 정적인 서비스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문화’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문화의 기반에는 AI 행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시민의 신뢰’와 ‘윤리적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토대 없이는 아무리 정교한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AI라는 강력한 도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모든 시민에게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AI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AI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낡은 IT 프레임워크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